# V 요약 및 결론

○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왔음

-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요청에 의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의 시기가 늦고 금액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
- 기업의 영업중단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음
  - 국내 기업휴지보험은 감염병 관련 통계가 부족해 리스크율 등 보험요율 산정이 정확하지 않고, 피해 규모 등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의 영업중단 손실은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○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국내 보험회사와 정부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

- 해외 사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초래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은 국가의 지원 없이 민영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
-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·사협력은 향후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
  -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, 재보험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험회사들은 공·사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

○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·사협력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

- 정부는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에 있어 재보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험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함
  -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,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·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,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
-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 재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
  - 농작물보험,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의 경우와 같이 발생의 빈도가 낮지만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
  - 따라서 동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활용의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리스크 완화 조치의 사전 실시의 중요성 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

○ **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공·사협력에서 보험회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음**

-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와 손해사정,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, 판매채널 등 기존 사업구조와 사업노하우를 활용해야 함
- 보험회사들은 영업중단보험의 보장대상, 면책사항 등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사업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
-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감면이나 리스크 기반 보험료(risk-based premium)와 같은 인센티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

○ **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 공·사협력 방안의 성공적인 구축과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**

-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영업중단보험에 대해 사업자와 보험회사의 참여를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임
  -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, 사고 시 다수의 인명과 재물에 심각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 팬데믹은 사고의 발생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의무보험을 통해 보상수단을 강제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음

- 사업자에게 보험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팬데믹 리스크에 노출정도가 낮은 업종의 사업자들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자들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보상이 발생할 수 있음
- 보험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보험상품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보험회사에 있어 자본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
- Zurich의 제안과 같이 사업자에게 100% 국가 재보험에 대한 선택권 부여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

•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보상의 방법에 대해 지수형 보상(Parametric formular) 또는 전통적인 실손보상(Indemnity) 중 어떤 방식을 따를지는 중요한 이슈임

- 지수형 방식은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이 단순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영업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보상의 과대·과소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- 실손 방식은 사업자들이 영업손실을 복구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손실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어려움

• 보험료 책정을 단일보험료(uniform pricing)를 사용할지, 리스크 기반 보험료(risk based premium)를 사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- 리스크 기반 보험료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사업자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 폐쇄 명령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
- 단일보험료는 사업자와 공공보건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보장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에서 리스크 완화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
- 정부의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리스크 기반 보험료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

•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에 대한 정의와 발동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

- 감염병 영업중단보험이 담보하는 리스크의 정의와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

손해사정을 용이하게 하고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확한 리스크의 측정과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

- 이에 대한 방안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보상에 대한 발동요건을 정부의 영업중단·폐쇄 혹은 건물 시설의 방역작업의 필요로 인한 손실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

•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구입할 가능성은 팬데믹 피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보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- 보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의 대부분을 보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면 사업자들이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장할 보험을 구입하거나 사전에 리스크 완화 조치를 수행할 유인이 낮아지게 됨

-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미국의 일부 팬데믹 영업중단 손실보상 관련 제안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향후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
○ **위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를 이해하여 공·사협력을 추진해야 함**

•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들은 어느 한 부문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함

• 정부가 보험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공·사협력의 필수조건이므로, 정부와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공·사협력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음

- 보험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단독으로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성공적인 공·사협력을 위해서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분 모두에서 서로 다른 원칙들과 한계들이 먼저 이해되고 고려되어야 함